

3부 성찰과 미래

사 회

정운영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주제 6: 한국의 민주주의운동, 87년 이전과 이후

-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

- 발제: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주제 7: 한국 민주화운동과 운동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

- 발제: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교육기획부장)

주제 8: 민주화운동과 기념: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 발제: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김진호(당대비평 편집주간)

-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김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민주화운동과 기념: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은 아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 이후, 특히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이 범한 각종 인권침해사례들을 처리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¹⁾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 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남긴 각종 유산의 청산운동은 이제 제도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권위주의와 민주화운동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기념사업이 제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980년 이후 약 20년간의 시기는 한국에서 군부권위주의정권으로부터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의 시기였다. '1980년의 광주'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87년 6월항쟁에서 가시화되었고,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세계적인 냉전체제 해체와 맞물려,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각종 인권유린 뿐 아니라 분단체제의 형성기에 벌어진 각종 민간인 학살사건이 남긴 유산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국가의 공식적 기억에 맞서서 다양한 형태의 증언채록, 민중의례, 기념물 조성을 시도해 왔다. 이들은 모두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망각 또는 침묵을 강요한 민중적 경험을 복원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었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성찰해보면,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세력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도전 뿐 아니라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5월운동이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내세우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한 직접적 도전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1988년

1) 이런 조직의 법적 근거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런 법률의 제정은 1년이상 천막농성을 한 유가협과 민가협의 투쟁에 힘입은 바가 컸다.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화된 4.3 복원운동²⁾이나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여순사건 복원운동, 2000년부터 본격화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운동 등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산출한 정치권력보다는 그것에 의해 재생산된 지배문화에 대한 기억투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기억투쟁은 과거의 국가권력이나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사회집단에 의해 억압되고 지워진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라지거나 망각되기를 요구받았던 민중적 경험을 복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청산운동은 정치투쟁일 뿐 아니라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이런 기억투쟁은 개인적 실존의 의미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한다. 즉 과거청산운동은 단지 '과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억압된 것을 현재로 복원하며, 미래의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의 통일과정이다. 대체로 민중적 경험의 복원과 재현은 '증언', 새로운 민중의례, 각종 기념물이나 기념공간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후속 세대의 미래의 삶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기억투쟁의 제도화는 기억투쟁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다. 우익적 기억이 곧 국가적 기억이었던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국가의 기억 독점에 저항하고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망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 시기에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면서 추념 또는 기념일 투쟁을 통해 기억투쟁을 수행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 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의 표출 자체가 저항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복원운동이 제도화되면, 과거의 투쟁의 기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관해 더 많이 논의해야하고, 민주화운동기에 이루어졌던 대항기억의 표출과 재현 방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만 해도 "누가, 무엇을" 표현하는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떻게"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김민환, 2003). 투쟁의 기억들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기억투쟁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질문의 전환은 오늘날 과거청산운동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 즉 제도화 이후에도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운동적 지향을 표현한 대안적 권력의 제도화 못지 않게 제도화가 가져오는 권력효과(Kertzer 1988)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기억투쟁이나 기념을 사회학적으로 개괄하고, 둘째 증언과 의례, 기념사업

2) 1980년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기적인 사회운동을 부르는 명칭으로 '오월운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1948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또한 한번의 정치적 결정이나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지칭하는 개념이 아직 없다.

을 중심으로 한 기념문화를 검토하며, 셋째, 현재의 민주화운동 기념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미래지향적 기념의 가능성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2. 기억투쟁과 기념

기억투쟁과 기념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념이 단지 하나의 정치적 행위였고, 또한 국가적 동원의 실천양식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최근 기념사업이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집합적 기념의 형성과정, 내부 동학, 사회적 영향, 다른 프로젝트와의 관계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된다.

원래 집합적 기념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근대에 이르러 가족이나 문중, 공동체의 기념행위보다 국가적 기념행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민국가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icon)을 갖추고, 국기나 국가 등을 만들었으며, 국경일, 국립 박물관, 독립기념관 등을 창출했다.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과거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의 표준화과정이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표준화과정이기도 했다. 국어와 국사의 출현은 집단적 기억의 국가화 과정이며, 또 그 결과물이다.

식민 경험을 한 국가의 경우 민족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상징정치의 중심에 놓게 한다. 원래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은 다양하지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후에 성립한 국가권력은 독립운동의 기억을 독점하게 된다. 이 국가권력은 대부분 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전을 거쳐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에 의해 과거의 기억 중 어느 하나의 기억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배제된다. 배제된 기억은 망각되거나 침묵의 세계에 머무르게 된다.

한국사회처럼, 식민지체제와 분단체제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경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해온 경우,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분단체제 하에서 국가권력은 항상 과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왔다. 분단국가의 성립은 개인을 민족과 국민으로 분열시키면서 모순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정치공동체의 집합적 기념은 불안정하게 되고, 자발적 기념보다 동원된 기념이 우세해졌다.

이승만정권이나 박정희정권, 또는 전두환정권은 그런 기념과 기억의 정치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들은 전쟁과 총동원체제를 활용하여 항상 자신에 대한 도전을 체제도전으로 전

치시켰으며, 이분법적 틀에서 적대감을 부추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각종 국가기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탈 권위주의화의 과정은 사회구조나 정치제도의 차원 뿐 아니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운동은 현재의 사회문제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할 뿐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생산하는가라는 기억투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집합적 기억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이다. 국가권력의 권위주의화, 군사화는 그에 대한 대립물로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영역을 만들어 갔다.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기억투쟁은 국가의 공식 기억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때 기념은 '누가 무엇을'의 문제로 제시된다. 국가에 대해 민간(시민) 또는 민중을, 안녕과 질서 대신 국가폭력과 저항영웅(민족민주열사)을 대치시키게 된다. 여기에서 기념의 주체, 또는 참가자격과 의무는 전치된다. 권위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동반하고 있어서 기념과 의례의 다양성, 또는 지방적 발전을 억제하였지만, 민주화운동은 지역과 계급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운동에 대한 기억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집합적 기억도 매우 지방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민주화운동에서 기념은 과거청산의 주요 원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념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에 선행하지 않으며, 그에 부차적인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 없는 기념이 어떤 문제를 낳는가는 1990년대 전반기의 5월운동의 역사가 증명한다. 기념의 요소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운동의 기간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기념보다는 기억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했다. 그런 점에서 기억투쟁과 기념은 연속적이지만, 민주화의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기억투쟁은 국가적 기억과 대립되는 대항기억을 표현하려고 하며, 대안적 상징을 형상화하려고 한다. 권위주의시기에 대항기억은 국가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되고 공격당하여 불안정해지며, 희석화되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고 보다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기념이 기억투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은 기념일투쟁, 참배투쟁으로 나타난다. 기억투쟁과 기념에는 항상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다. 원초적 사건의 경험을 공유한 기념주체의 기억 속에 있는 '기원', 또는 최초의 생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들은 원초적 시공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이런 점에서 제의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의례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의례를 통한 저항과 함께 저항의 의례화가 진행된다. 국민의례와 구별되는 민중의례는 묵념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장르, 특히 노래, 걸개그림, 율동 등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묵념의 대상은 '순국선열' 대신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먼저 가신 희생자'로 대치되었다. 의례투쟁에서는 상징적 장소의 확보가 중요하다. 운동의 초기에는 상징적 장소의 일시적 점유가 일어나지만, 점차 반복적, 항구적 점유로 나아간다. 기념비 및 기념관 조성은 장소의 측면에서 보면 항구적 점유로 나아간 것이다.

기념의 방식에서 '어떻게'의 문제는 대체로 기념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사례가 누적되면 암묵적 상호비교를 통하여 제기된다. 제도화 이후 기념행위가 가진 역사 창출력은 감소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어떻게'의 문제는 과거의 기억투쟁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학적 관점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운동문화에 대한 반성을 수반하며, 동시에 기념의 다중성에 관해 착목하게 된다. 기념의 다중성이란 동일한 기념물이 그것을 읽는 청중들에게 서로 다르게 다가오는 현상을 지칭한다. 예컨대,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원폭돛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잠재적으로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으며, 5.18 민주항쟁탑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위령과 부활의 기원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민주화운동과 기념의 관계는 이중적이며 단계적이다. 기념행위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항상 존재했다. 민주화운동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나 그것에 선행하는 과거의 기념할 만한 역사적 경험들이나 인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 기억과 대립되는 대항기억으로서 존재했고, 따라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기념은 기억투쟁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되었을 때, 기억투쟁은 민주화운동 경험에 대한 집합적 기억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영역에서 기념행사로 전화된다.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기억투쟁에서 형성된 자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연속되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은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기억투쟁은 흔히 죽은 자에 대한 위령, 추모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탄압으로 인한 위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죽은 자에 대한 명명, 의사 또는 열사라는 칭호는 민주화운동의 정당성 부여의 한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추념은 항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원 또는 근거지로 돌아가려는 원리를 지닌다. 종종 참배투쟁과 기념일 투쟁은 결합된다. 1970년대 학생의 날과 수유리 4월혁명 묘지 참배투쟁, 1980년대 초반의 망월동 묘지 참배투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중적 기억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되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로 표출될 때는 종교적 추념 이외에도 학문적 담론의 형태로 제기된다. 1980년대 후반의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제주4.3연구소, 4월혁명연구소, 또는 1990년대의 여수사회연구소 등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민주화의 심화 정도와 기억투쟁의 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기념의 문화적 양식화, 의례의 축제화가 중요해진다. 필자는 민주화운동은 개인의 자유권과 사

회권의 확대 뿐 아니라 과거의 왜곡된 사건에 대한 청산이기도 하며, 그래서 민주화운동은 범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깊이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정근식 2002).

3. 기념문화에 대한 성찰

1) 침묵과 증언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행위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체험을 담론화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구성해간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억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식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동시에 민중의 경험을 채록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조현연은 박정희 통치시기를 ‘전 사회의 병영화, 폭력적 군사문화와 침묵사회의 출현’이라고 표현했는데(2003, 123), 여기에서 침묵은 지배권력의 폭력이 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으로 합리화되는 전도된 정치현실의 한 측면이었다. 그는 이런 침묵이 역사적 희생의 반복에 기여했다고 보았다(2003, 125). 침묵은 말하면 위험한 역사적 지식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에는 힘이 있다.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Sider & Smith, 1997, 302).

언표되지 않은 기억은 침묵 속에 존재한다. 침묵은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기억과 현실의 질서가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침묵은 길어진다. 침묵은 억압된 기억의 현존형태이다. 침묵이 길어지면 망각에 이르기 쉽지만, 피학살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섬광기억에 속한다. 그런 경험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저항문화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런 침묵을 깨뜨리는 ‘소리 내기’였다. 침묵 깨뜨리기는 은밀한 장소에서의 낙서, 군중 속에 얼굴을 숨긴 익명적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추념투쟁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때때로 이것은 침묵시위로 이어졌다. 침묵으로부터 발언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각종 법적 규제와 물리적 폭력, 심리적 공포를 이겨가는 과정이다. 집단적 저항의 초창기에 정보기관이 가진 ‘카메라’는 얼굴 드러내기의 수단이었으므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의 시위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목소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데모 주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발언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인가를 숙고했고, 이 때문에 진압경찰이나 백골단의 손이 쉽사리 미칠 수 없는 장소를 골라 핸드 마이크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데모의

기억은 항상 진압경찰이나 백골단, 그리고 최루탄과 함께 있다. 민주화운동자들이 혁명이나 계급이라는 개념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용어는 민족이었다.

한국에서 국가적, 체제옹호적 기억은 언제나 쉽게 표현되어 왔지만, 민중들의 집단적 기억은 분단체제나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또는 공동체에 의해 표출이 억제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관념적으로 천부인권에 속하나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근대적 사회운동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식적 기억과 공동체의 기억이 충돌하는 경우 기억의 표면과 심층, 또는 공식적 담론의 세계와 비공식적 담론의 세계가 단절된다. 이런 단절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기억이 국가적 억압을 뚫고 표출되는 것은 민주화의 국면이며, 좀더 좋은 정치적 기회를 맞게 되면, 증언이나 기념물의 건립으로 나타난다. 증언, 의례, 기념물, 문화적 텍스트들은 이런 기억투쟁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 기초적이고 담화적인 것이 구술 또는 증언이다.

증언은 기억이 언표된 것이다. 증언은 한편으로는 공식사에 의해 부정된 민중적 경험을 드러내는 사실 규명적, 폭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증언자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증언의 초점이 달라지지만, 동시에 증언 채록자의 목적과 면접 틀에 따라 달라진다.

증언은 많은 경우 자발적이라기보다 그것을 이끌어내려는 사람에 의해 이끌려진다. 증언 프로젝트는 일종의 과거청산운동에 속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다. 증언은 기억을 말로, 나아가 그 말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증언자와 채록자 모두 자신의 대화를 글로 정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검열의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자기검열의 틀은 물론 정치적 지형,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증언 채록은 사실상 증언자와 채록자의 대화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언록(자료집)은 두 사람의 공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험에 따라 시간감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성과 계급에 따라 동일한 언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쉽사리 어느 한편의 언로로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증언자라도 그가 행한 증언은 서로 다른 뉘앙스를 지니며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증언은 증언자와 채록자의 대등한 권력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행위자의 목적의식성을 강조하느냐, 상황의존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리나 편집은 오히려 증언자보다 채록자에게 속하는 영역이다. 정리의 방식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말은 언제나 상황의존적이어서 문법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항상 표준어로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를 따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편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증언은

채록자와 증언자의 공동작업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증언의 내용에는 일차적으로 증언자의 사건 후의 경험과 변화된 인식의 지평이, 이차적으로는 채록자의 인식이나 지식과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증언자와 채록자는 기록된 증언의 공동 저자가 된다. 이것은 거꾸로 채록자의 관심, 인식의 지평, 지식의 정도에 따라 증언의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언의 구체성, 사실성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증언의 집적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자기 확인은 보다 집단적인 의례나 물질적 기념으로 나아가도록 고무한다. 증언집이 발간되면, 증언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읽게 되며, 이를 통해 그것들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 사건의 증언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할 때, 단지 시간효과 뿐 아니라 선행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보는 성찰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증언과 트라우마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증언이 폭력에 의해 상처를 받은 희생자들의 트라우마의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때때로 트라우마는 증언을 억제하기도 한다. 증언이 단지 사실 규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증언자의 삶 자체라는 인식은 윤택림(1994), 유철인(1996) 등에 의해 지적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조사팀에 의해서도 제기되어왔다(한국정대협 외, 1997, 251), 이들은 점차 조사방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1999년에 출판된 증언집 3권은 이전의 증언집에 비해 정리자의 '구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우리는 왜 증언채록을 해왔는가"라는 좌담회(한국정대협 외, 1999, 335-363)에서 증언채록의 문제의식과 방법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 팀의 조사지침을 공개하였다.

2000년 12월의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준비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증언채록(2001)은 기존의 증언 채록방법에 대한 반성을 수반하였다. 증언이 '묻기'에서 '듣기'로 초점이 옮겨지고, 증언의 재현이라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양현아(2001)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군위안부의 증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언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증언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정보 통제기구가 보관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연구에는 이들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증언채록사업이 필요하다. 이 때 사실규명적 증언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나 의미를 포착하는 증언이 채록되어야 한다.

2) 의례와 축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른바 민중의례를 발전시켰다. 민중의례는 명백히 국가의례의 대안물이다. 이런 대안적 의례가 발전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식민지 강압통치를 연상시키는 국기에 대한 맹세나 국민교육헌장의 낭독 등을 통해 일상적 국가의례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민중의례는 의례의 도입부를 지칭하기도 하고 의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자를 의미하며, 주로 '먼저 가신 민주열사'를 추념하는 목적으로 집약된다.

민중적 의례는 죽음을 매개로 한 추념투쟁으로부터 성장한다. 1970년대에 추념투쟁은 4.19혁명 기념일이나 학생의 날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4.19묘지 참배 자체가 저항행위였다. 식민지 시기의 학생운동을 상징하는 학생의 날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이 날의 기념투쟁은 유신독재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80년을 경과하면서 추념투쟁은 망월동묘지를 초점으로 하여 재구성되었다. 시위문화도 크게 달라졌다.

민중적 기념의례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깃발과 몸짓이다. 의례 참여자들은 특히 결의나 구호를 외치면서 팔동작이나 특정한 몸동작을 행한다. 이런 몸동작의 발전은 1980년대 중반의 '해방춤'이나 특정 구호외침방식과 함께 발전되었다. 이것은 시위 및 의례에서의 신체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 후반 팔을 흔드는 방식이나 구호를 외치는 방식의 변화로 나아갔다. 일회 외침으로부터 3회 반복외침 형식으로의 변화, 선창과 따라 외치기 형식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민족해방 계열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에서는 의례미술도 발전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의 판화가 포스터나 책자에 널리 활용되었고 걸개그림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의례음악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대신 민중가요는 춤과 결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1930년대 나치독일에서도 이러한 신체문화가 크게 발전했다는 점이다(Mosse, 1975).

우리는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열사나 영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4.3이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열사라는 칭호를 붙이지는 않지만,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자들에게는 그런 칭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987년 이한열 장례식에서의 문익환 목사의 호명, 그리고 1995년 안티 비엔날레에서의 만장에 새기는 방식으로의 호명행위 자체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낯선 외국인들은 때때로 영령이나 열사라는 호칭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 다만 Mosse의 'fallen soldiers'를 일본에서 영령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런 죽음의 영웅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례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이 축제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행했던 각종 행사나 의례를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축제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해마다 치루어야 하는 행사를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축제이론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80-90년대의 민주화운동에서 겪은 장례투쟁이나 5.18전야제를 혁명축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축제이론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바흐친에 따르면, 축제는 한편으로는 정해진 법, 제도, 구조의 테두리 내에서 특정한 날짜에 행해지는 의식이다. 다른 한편으로 축제는 19세기 이전에 갈등과 반항의 과정에서 채택되었던 상징적 실천, 이미지-담화들을 포함하고 있다(여홍상, 131). 공식적 축제들이 과거를 고착시키고 세계질서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회구하는 의식이라면, 카니발은 모든 공식성을 일시적으로 파기하면서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적 발효소가 된다. 카니발의 세계는 변화와 생성과 갱생의 기쁨을 지닌 열린 지평세계이며 영원한 것, 고정불변한 것, 과거의 것을 성화시키는 공식적인 문화의 세계에 대립하는 반문화의 세계이다(바흐친, 731). 기존의 위계질서를 파기하고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접촉을 실현할 수 있는 까닭에 카니발은 독특한 언어형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카니발의 언어는 '유쾌한 상대성'을 실현하고 세계를 거꾸로 혹은 뒤집어보는 언어로서 패러디와 욕설이 여기에 속한다(731-732).

축제와 정치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허가된 축제는 사회통제의 한 형태이며 공식문화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여홍상, 128). 글루크만도 아프리카의 축제를 보면서 그들의 예식은 확립된 질서에 반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질서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M. Gluckman 1963, 109). 그러나 우리가 미처 축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5.18전야제나 장례투쟁과 같은 축제들에는 이와 다른 정치적 함의가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정근식 2003a). 오히려 문제는 축제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것이라면,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축제는 혁명축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좀더 논의해야 할 어려운 질문에 속한다.

3) 기념물과 기념공간

1980년대 이후 기억투쟁에서 두드러진 것은 각종 형태의 기념물 조성을 포함한 기념사업이었다. 기념물 조성은 과거에도 늘 있었지만, 민주화운동이나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세워진 기념물은 대항 이데올로기의 집합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달랐다. 집단적 기억은 의례나 기념물로 물질화되어 존재한다. 집단적 기억이 기념물화되는 경우 기억 드러내기는 증언과는 다른 영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가지게 된다. 기념탑이나 그 밖의 기념공간의 조성은 증언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기념물은 그것이 조성될 때 조성 주체의 집합적 기억을 표현하고 영속화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이다. 기념비는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이지만, 그 표현은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이 정치적 지평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 고양기에 식민지시기와 해방 직후의 시기를 잇는 지역적 전통을 표출하는 기념탑 건립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역사적 경험의 연속성과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억으로의 표출은 집단적 경험을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 의해 분절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에서의 비대칭성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전쟁기 기억의 표상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쟁기 경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른바 좌우파 양쪽으로부터의 테러와 희생을 포함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분단체제는 국가폭력이나 우익테러에 의한 희생은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좌익테러에 의한 희생은 일찍, 국가적 지원에 의해 표현되었다.

집단적 기억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겉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지만, 때때로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드러낼 수 없는 기억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거나 잠복해 있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 기억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4.3의 기억이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 의례, 특히 원혼을 불러내 진무하는 굿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죽음 의례는 초월성을 지니며, 이 초월성에 의존하여 기억이 희미하게 유지된다. 민속의례나 종교적 의파는 이런 반체제적, 반국가적 기억의 보호막으로 기능해왔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집합적 기억을 다룰 때,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을 포착해야 할 과제를 안겨준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집합적 기억의 기념물(기념탑) 드러내기의 지평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드러낸 것과 드러내지 못한 것, 지워버린 것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의 긴장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기념의 정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에 관해 말한다면, 표상화의 여부가 쟁점이었던 상황에서 표상화의 방식, 특히 미학적 방식이 쟁점이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념물은 많은 경우, '기념탑' 중심주의의 경향이 있고, 또한 기념탑과 함께 다른 학습의 장을 겸비한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기념은 점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원으로 재해석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의례와 참배의 공간으로부터 학습과 문화의 장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기념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개입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념탑보다 더 큰 규모의 기념공원 조성은 비록 공동체가 주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종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충분한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형성된 지역활성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은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념물이나 기념공간의 조성원리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형성되었다.

추념공간의 이념형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사실상 1993년 광주에서 '5월 성역화' 논의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1997년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5.18묘지의 이전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운동의 공간, 추념의 공간으로부터 의례의 공간으로, 또는 민중적 의례의 공간으로부터 국가적 의례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념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2000년 4.3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4.3 복원운동의 핵심사업으로 평화공원 조성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2001)을 작성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한국사회에서의 기념사업 및 기념공간조성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인데, 왜냐하면 국내의 주요 기념물 및 기념공원에 대한 상당히 치밀한 답사와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계획 작성 팀은 광주 5.18의 기념물 조성방식과 기념물의 공간적 특징과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무엇을 뛰어 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것은 중앙의 거대한 기념탑과 좌우 대칭형 공간구성, 제단과 추모공간의 위계적 배치였다. 이런 점 외에도 묘지의 표준화와 획일화에 따른 산 자와 죽은 자간의 의사소통 공간의 제거, 묘지조성과정에서의 민주열사와 5월 열사의 분리 등도 자주 지적되었다.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들, 즉 4.19 묘지나 부마항쟁 기념공원, 그리고 5.18 광주항쟁의 기념공간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정호기의 연구(2002)에 따르면, 비록 이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기념공간이지만, 권위주의 시기에 자리 잡은 국가주의적 기념공간의 구성원리, 즉 국립 현충원 모델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또한 집합적 기억의 표상화 방식에서 건축 양식의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대체로 그것은 전통주의나 근대주의의 경향을 지니거나 이들의 혼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5.18 묘지의 경우 기념탑의 모더니즘이 여러 부속 건물의 전통주의와 어울려 '광주'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은 예컨대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념 프로젝트에 또 다른 권위주의나 과도한 민족주의, 또는 남성주의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

였다.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기에 집단적 기억의 표상화 방식이 일반적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남성주의, 거대주의의 경향에 지배당하기 쉽다면, 근래의 비판 준거들은 자연친화적 환경주의, 여성주의, 반국가(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게 된다.

4.3의 경우 기념물, 또는 기념공원 조성을 둘러싼 기억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002년에 이루어진 평화공원 조성안 공모 심사에서 제시된 작품들은 5.18 묘지가 안고 있던 거대형 중앙 단일탑 구조를 극복하고 있으나 당선작은 기념탑이 반원형 기념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 공간구성의 원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선작과 낙선작의 가장 큰 차이는 추념공간의 직방형적-위계적 구성과 원형적-민주적 구성, 위령제단의 전방 배치와 쌍방향적 배치(원심과 구심의 동시적 존재), 공간의 일원화와 이원화, 상징물의 모던적 구성과 포스트모던적 구성(실루엣 기법), 기념물의 현재완료형과 진행형(백비) 구성 등에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정신에 상대적으로 더 충실했던, 탐미협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평화공원 구상안은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스스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하여 '상상공원' 이라고 이름붙인 구상(민예총 제주지회 2002)은, 기존의 기념물 조형 방식과는 사뭇 다른 매우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된다(정근식, 2003).

4. 민주화운동 기념의 한계

1) 이념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은 얼핏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갖거나 동어반복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현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의 민주화의 단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차이를 드러낼 뿐 아니라 지향점도 다르다. 계승을 강조할 경우 기념사업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민주화운동'의 정체성은 모호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냉전적 분단의 장벽에 막혀 귀국하지 못했던 해외 민주화운동가들을 입국하도록 초청하여 여행자유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 사업은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 그 자체로 간주하지 않고 분단 반복 이데올로기로 재단해온 과거의 관행을 청산하는 과정의 일환인 셈이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의 기념은 불가피하게 '민주주의 담론'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기념사업의 이념적 어려움은 명예회복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명예회복은 국가권력이나 특정사회집단에 의해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경우에 제기되는 요구이다. 명예회복은 자명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의미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명예' 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명예의 '회복' 인가이다.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독재정권하에서 이념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공격받아왔다. 민주화운동의 수행지는 '운동권'으로 규정되어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사건이 발발했을 경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빨갱이, 불순분자, 또는 간첩 등의 이념적 딱지가 붙거나 폭도와 같은 비이성적 존재라는 딱지가 붙었다. 법률적으로 보면 긴급조치나 집시법,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저촉되는 범법자였다. 때때로 이들에게 양심범의 규정 대신 파렴치범으로 규정되는 범칙조항을 들이대기도 하였다.

명예회복의 어려움은 국가폭력이 이런 의식적 활동가 뿐 아니라 그야말로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사람에게도 '우연하게' 가해졌다는 사실에서 온다. 죽음을 맞은 경우에도 분신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자살에 의한 경우, 고문이나 시위진압 등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경우로 구별된다. 그런데 국가폭력이 노골화되는 단계에서는 의식적 활동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자에게는 동일하게 민주열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광주항쟁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은 운동주체나 참여자를 '폭도', '불순분자', 또는 '빨갱이'로 매도하고 언론은 이를 전파하거나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이런 국가권력의 공식적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대안적 규정이 존재했다. 이런 대안적 규정은 사망자의 경우에 부여되는 '열사' 규정이다.

4.3 복원운동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분단체제하에서 '명예'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희생자는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폭도나 빨갱이가 아니라 양민 또는 민간인임을 증명 받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의 조직적 활동가들이나 실제로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명예가 없는가. 이런 점에서 명예회복 방식을 둘러싸고 최대한 그들을 양민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있었던 그대로를 드러내는 방식 사이에 긴장이나 대립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인식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종종 나타나는 '국립' 지향주의가 갖는 역사적 한계에도 적용된다.

명예회복방식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회복과 법률적 회복간의 괴리도 있다. 명예회복은 명백히 법률적 차원과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명예회복'의 딜레마는 법률적 규정과 정치사회적 규정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비록 운동참여자가 특정 행위로 인하여 법률적으로는 범법자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명예가 추락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적 시민사회나 특정 공동체 내에서는) 명예를 획득해왔다. 명예회복은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모순적 요소를 포함한다.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확정되는 과정은 명예회복의 핵심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꼭 그만큼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명예회복은 분명히 국가의 공식적 사과 뿐 아니라 언론기관의 사과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런 방식의 명예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기념체제(주체)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에서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는 전국성과 지방성의 문제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그렇듯이 기념사업도 전국적 맥락과 지방적 맥락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4월혁명이나 6월항쟁은 전국적인 것이나 이는 주로 서울의 문제로 간주되는 반면, 부마항쟁이나 5.18의 경우 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사건이면서 전국적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사건이 발생했던 도시가 기념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마산은 4월혁명 중에서 3.15를 부각시킨다. 부마항쟁의 경우 부산과 마산사이에서 기념일을 자기 지역의 입장에서 부각시킨다. 동학농민전쟁의 경우, 농민군이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에 농민혁명기념일은 지방도시마다 다르고, 하나의 기념일을 정하여 공동의 기념 행사를 치르고자 할 경우 기념일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기념일의 선택에는 지방성이 크게 작동한다.

기념일 이외에 기념의 장소도 문제가 된다. 민주화운동 기념의 선구적 모델은 광주가 제공했다. 이른바 5월 행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를 가진다. 5.18묘지와 도청 앞 광장, 5.18 기념공원 등은 모두 기념해야 할 사건을 갖는 독자적인 장소이다. 5.18의 공식 기념일은 5월 18일이지만, 대부분의 학술행사나 문화행사는 5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기념의례 또한 17일의 추모제와 전야제, 18일의 공식 기념식, 22일의 민주기사의 날, 27일의 부활제등으로 나뉜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기억의 반영이다. 따라서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여러 장소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하며, 이들을 묶어내는 하나의 기간이 설정된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축제의 기간으로 전화될 수 있다.

광주의 기념방식은 다른 도시의 '따라 하기'의 긍정적 준거로 작용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지 않기'의 부정적 준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광주와 '다르게 하기'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념사업의 주체, 예산 등의 측면에서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다.

기념주체나 대상의 문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희생자들의 이

질성 문제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활동가들이 많고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당사자들인 반면, 대량 학살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유족들이며 노인층이다. 대규모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도 의식적인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과 말 그대로 무고하게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으로 구별된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구분이 적용된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즉 자발적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죽임을 당했는가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들은 많은 경우 학력에서 그리고 계층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는 보상과 기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사정이 어려운 희생자 가족들은 당장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며 이는 곧바로 국립묘지나 국가유공자 지정요구로 나타난다. 광주 5월열사와 민주열사는 확실히 구분되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은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극적으로는 서울에서 진행된 민주화운동들을 기념하고, 적극적으로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기념사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해외 기념사업 사례 조사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정이 갖는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 첫째는 이 조직이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념사업조직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5.18재단이나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 조직보다 늦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여전히 기념보다는 운동의 지속성, 즉 계승을 강조하는 조직과의 긴장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한편,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의 문제는 기억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후속 세대를 향해 있는 것이며, 아울러 '동 시代人' 이면서도 민주화운동의 밖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민주화운동 교육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놓쳐서 안 되는 점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문제가 밖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안의 파시즘' 이나 '우리안의 군사문화' 를 씻어내는 일 또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내적 의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또한 자기학습이기도 하다.

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유가협, 민가협,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4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15개의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조직과정에서 정치인 제외, 지역과 부문의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였다.

3) 기념사업의 범위와 대상

오늘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5.18의 국가기념일화, 5.18묘지의 국립묘지화, 국가의 예산 지원에 의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기념의 국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기념일 제정이나 국립묘지 제정 문제는 (분단)국가 형성과 관련된 사건들과의 외적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내 기타 사건들과의 내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기념의 대상은 '1948년 이후의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이지만, 명예회복법에서 민주화운동은 '1969년 이후' 로 규정되었다. 양자의 차이는 기념과 보상, 명예회복조치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 개입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임시방편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1969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이 어디에 위치해야하는가가 모호해진다.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운동도 원래의 사건은 자주민족국가 수립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만, 그들 자체가 일종의 민주화투쟁의 일환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에 대한 기념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파생하게 된다.

또한 양자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면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운영, 민주화운동 역사정리를 위한 자료 관련 사업과 연구, 민주화운동 유적 관련사업,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사업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공원 건립을 담당하였다. 두 개의 구별되는 법과 이에 따른 조직적 분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어려움을 낳는다. 예컨대 민주기념관과 민주묘지의 건립은 별개의 사업으로 위치지워졌다. 두 기념사업 법 모두 적용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면, 해외에서 진행된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민주화운동을 직접적 정치투쟁에 한정시키지 않고 민중생존권 운동이나 민족통일운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사업규정에서의 모호성은 '계승사업' 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기념사업의 범위에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이 국제연대의 문제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험은 아직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한 나라들에게는 이상이요 꿈이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불만스럽지만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는 커다란 자극이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해외의 열악한 민주화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기념의 방식

기념의 핵심은 계승이다. 이것은 기념주체의 정치적 재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

기념사업은 교육사업, 즉 세대간 경험의 계승사업을 포함한다. 기념사업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기념사업회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주도형 프로그램과 학생이나 청소년집단이 자기 스스로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형 프로그램이 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후세대대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주체성을 고양시킨다는 맥락에서 후자의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사업회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의 내용으로 보면,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화운동 교육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기념문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록문화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백년이상 진행된 억압체제의 영향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심경을 드러내는 기록에 소홀하다. '보안 문제'로 인하여 운동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손쉽게 이루어지는 기념물이나 기념관 건축 지상주의에 경도되어 왔다. 둘째, '국립' 지향주의이다.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컸으며, 따라서 '국립'을 지향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관제화의 위험은 간과했다.

한국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념공간의 문화는 한마디로 거대 기념물주의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국립묘지형 좌우 대청구조와 의례의 주체와 참여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 의례 공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전시는 근대의 시각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것이 친숙하게 된 것은 암암리에 작동한 서구 근대성의 영향이겠지만, 유교적 기념비문화와의 연속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긍정적 전시와 부정적 전시의 조화와 함께, 남성적 세우기와 여성적 가리기 방식의 조화, 오브제 중심의 설명적 전시와 체험적 전시의 조화, 이성적 호소와 함께 신체적 각성을 동반한 전시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념물 및 기념관은 새로운 장소에 신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상징성을 가진 장소와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 그리고 환경친화적 공간구성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는 전시공간도 가능하다. 대만 녹도의 정치범수용소 기념물은 기존의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성한 훌륭한 사례이다. 또한 오브제 중심의 전시를 통한 설명방식, 교훈을 강요하는 방식의 전시에 대하여 우리의 신체 속에 내장되어 있는 불안, 공포나 고독을 느끼도록 하는 감성적 전시도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의 기념사업은 '기념의 정치'로부터 점차 '기념의 문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은 고정 불변의 이상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정 시점의 시각이나 상상력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것보다 그 시점에서의 몫만 채우고 앞으로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채

워지도록 열어두는 것이 좋다.

5. 맺음말: '미래지향적 기념'은 가능한가

2003년 광복절 기념식은 1946년 3.1절 기념식이나 해방 광복절 기념식이 좌우로 나뉘어 거행된 이래 거의 60년 만에 다시 쪼개져 거행되었다. 사실 정부수립 이래, 또는 한국전쟁 이래 국가 의례가 공공영역을 독점하였고, 특히 권위주의 군사독재가 자리 잡은 이후 이것은 동원형 의례로 형해화되었다. 1980년 이후 의미를 가진 것은 오히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민중적 공공의례였다. 민주화운동은 확실히 이 기간에 도덕적 헤게모니를 형성하였다. 공공의례는 국가의례를 압도했다. 그러다가 최근 북한 핵문제가 쟁점으로 되면서 다시 공공 의례는 정치투쟁의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정권의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도덕적 헤게모니는 다시 공격받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한편으로는 이념적 반대자들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권력 장치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진행된 민주화의 허점들을 메우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미완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내적 도전을 받고 있다. 역사는 항상 작은 역사들의 도전에 직면한다. '누구의 역사인가'라는 질문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권위와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민주화운동 기념의 미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의 올바른 계승으로 되려면 불가피하게 '기념'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광주에서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행사의 주제나 캐치프레이즈는 '광주에서 통일로'였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이나 현재의 이에 대한 기념사업이 모두 분단체제하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그러나 5월운동이 곧바로 통일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내적 딜레마가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지평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광주의 5월운동과 4.3복원운동은 1998년에야 비로소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양 지역에서의 행사에서 서로 교류하고 지원하며, 연구 차원에서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화두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가 있다. 물론 이 사회적 거리는 이념적 측면에서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들을 매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가 국가폭력과 인권이었다. 한 사건은 분단체제의 형성기에, 다른 한 사건은 분단체제의 전환기에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두 사건 모두 분단체제와 관련이 있고,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이 인정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거청산운동과 그 속에서 진행된 민중적 경험의 복원 프로젝트의 성과는 보다 나은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의 이행기에 이루어진 각종 증언 프로젝트, 민중의례, 문화운동, 기념물 조성 등이 당시의 '진상규명'이라는 보다 넓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갖게 된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기념문화를 보편적 기준에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에 속한다.

의례나 기념물 조성의 경우, '박제화'라는 단어는 혐오의 상징어였다. 실제로 몇몇 영웅이나 민중들을 표현하는 인물상들은 한국적 전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서구적 인물상을 모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념공간 또한 '국립' 묘지와 똑같은 공간적 배치원리를 재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념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매너리즘적 기념이다. 기념행위에서 나타나는 매너리즘을 정확히 지적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의례의 경우, 다양한 원초적 사건들의 경험을 구체적 기억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상징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이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도 작용한다. 어떤 방식이건 밑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억제하는 방식의 기념은, 그것이 전국화로 표현되든, 세계화로 표현되든 관계없이 제대로 된 역사적 계승을 방해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념관과 기념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위주의적 미학 또한 극복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민주화운동이나 민족운동의 전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양식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과거에 붙들려있는 기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기념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 강창일, 「제주 4.3진상규명운동과 한국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창간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1.
- 김민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2003.
- 김영범,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김종민, 「4.3 이후 50년」,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나간채 · 염미경 · 김혜선, 『기억에서 영상으로』, 광주 YMCA 5.18 영상기록특별위원회, 1999.
- 나간채 · 이명규 편, 『5.18항쟁 증언자료집』 1, 전남대 출판부, 2003.
- 바흐친(이덕형 · 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 양현아, 「과거청산과 증언의 의미-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폭력의 역사는 청산될 수 있는가』, 제주4.3연구소, 2001.
-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1994.
- 이문교 외, 『제주 4.3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2001.
- 정근식, 「과거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역사』 61, 2002.
- 정근식,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학살, 기억, 평화』 (제주4.3 55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논문집), 2003.
-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정호기, 「민주화운동의 기억투쟁과 기념」,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2003.

조현연, 「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 안의 군사문화」, 『기억과 전망』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차성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주체와 방향」, 『무엇을 ‘기억’ 하고 ‘기념’ 할 것인가- 민주화운동연구단체 공동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3.8.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 평화공원 현상설계공모를 분석한다」, 『제주문화예술』 2002년 가을호.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3, 한울, 1993, 1997, 1999.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Bell, C.,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Duncan, J. and Ley, D. eds.,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1993.

Gills, J.R., *Commemorations-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Kertzer, D.I., *Ritual Politics, and Power*, Yale University Press, 1988.

Middleton, D. & Edwards, D., eds., *Collective Remembering*, London: Sage, 1990.

Mosse, G.L.,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NY: Howard Fertig, 1975.

Schwartz, B.,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of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2, 1982.

Sider G. and Gavin Smith, *Between History and Histories: The Making of Silence and Commemoration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Thomson, P., *The Voice of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Tonkin, E., *Narrating our Past: The Social Construction of O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Winter, J.,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